

202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노동과 인륜, 문제집과 개선 방향

2023년 11월 14일(화) 14시~16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대강당

2023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발행인 김선태

발행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발행일 2023년 11월 14일

주 소 (04918)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전 화 02-460-7622

2023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노동과 언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14시 ~ 16시

장소 | 주교회의 4층 대강당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참여 | 현장 참석 및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진행
유튜브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

문의 | 02)460-7622, 010-7516-1312, 010-4529-3368

사회 | 이영훈 신부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총무 /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인사 말씀

김선태 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발표

발표 1 | 고 양회동(미카엘) 노동자와
건설 노조 탄압을 중심으로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언론 담당)

발표 2 | 노동 보도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과 원인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발표 3 |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
정현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자

토론과 질의응답

공동주제 토론
기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마무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자료집 목차

인사말씀	노동과 언론,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09
발표 1	‘건폭몰이’와 언론, 그리고 양회동 열사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전국건설노동조합)	13
발표 2	언론이 만든 미신, 노동을 지우다 탁종렬 소장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35
발표 3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 정현진 기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49
토론문 1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전국건설노동조합)	59

인사 말씀

노동과 언론,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 해의 결실을 얻는 계절, 2023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풍요로운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한 분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부활 메시지에서 밝힌듯이 “무고한 사람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토론회 때 다루었던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 처벌법’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일부 정치권과 기업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리 사회 안에 ‘노동 혐오’를 조장하고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활동을 조직폭력배의 범법행위로 취급할 뿐 아니라, 공권력을 남용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언론 본연의 역할인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보 전달’(『가톨릭교회교리서, 2494항 참조』)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과는 달리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그 도덕률을 충실히 지켜야”(『사회매체교령, 5항』)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모든 형제들, 205항 참조』)을 대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이 오히려 스스로 권력이 되어 가진 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진실 보도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념적 이득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고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의 양심과 민주적 절차” 등을 왜곡할 뿐 아니라(『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89항』), 심지어 “이러한 관행을 정당화하거나 용납”(『모든 형제들, 201항』)하려는 권력을 지닌 이들. 그중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교황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저는 언론 소비자인 우리 자신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식견과 정확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공동선을 파괴하는 언론을 우리가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우리의 부족함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96항 참조』).

저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혐오하는 문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실현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할에 언론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잠언, 12,19)라는 성경 말씀처럼 결국 ‘진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연대를 근거’(『가톨릭교회교리서, 2494항 참조』)한 취재와 보도를 실천하는 언론만이 생존하고 우리 사회에 봉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시고자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토론회 현장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2023년 11월 1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발 표 1

**‘건폭몰이’와 언론,
그리고 양회동 열사**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건폭몰이’와 언론, 그리고 양회동 열사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건폭 몰이’와 언론, 그리고 양회동 열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김준태

건설업계의 ‘건폭몰이’ 압력

- 2018~2019년 ‘건설노조 갑질 근절’ 청와대 국민청원
 - 2019년 5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촉구’에 대한 건의’ 발표 후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에 공문 접수
-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기계설비건설업체 등 건설관련 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조직.

— 청원진행중 —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참여인원: [30,310명]

카테고리 및 지역 | 청원시작 2019-03-25 | 청원마감 2019-04-24 | 청원인 naver-***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마감 | 청원완료

건설업계의 '건폭몰이' 압력

- 문재인 정부 2021년 9월 28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TF 구성 (국무1차장)
- 2021년 12월까지 약 100일 간 집중점검(국토부 신고센터설치 관계부처 합동)
- 과태료 부과 4건(총 6천만 원) 103명 검찰 송치(1명 구속)
-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 자료	대한민국 대한민국 판 뉴딜	
보고일시	배포일시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2022. 1. 19(수) 배포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 이경제, 경위 변지환 (044-200-2375, 2377)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과장 김승환, 서기관 백석현 (044-202-7620, 7621)		
	공정채용기반과	과장 이부용, 사무관 정다비 (044-202-7432, 743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우정훈, 사무관 나은중 (044-201-3538, 3539)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과장 전성훈, 사무관 김혜인 (044-200-4551, 4553)			
경찰청 수사과	과장 송영호, 경정 최연석 (02-3150-2068, 1144)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 전액 징수(총 6천만 원), 103명 검찰 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건설업계의 '건폭몰이' 압력

- 2022년 초 전문건설업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2022년 종합건설업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2022년 7월 노동조합 현장 활동에 대한 행위 근절을 위한 로드맵 국민의힘에 제출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 규정 제안 등



건설업계의 '건폭몰이' 압력

 경찰청	보도자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	-------------	---------------------------------

보도 일시	2022. 12. 7. (수) 12:00	누리망·방송	2022. 12. 7. (수) 12:00
-------	------------------------	--------	------------------------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책임자	총경 송영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최연석 (02-3150-1144)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① △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 갈취 △ 채용·건설기계 사용강요
△ 불법집회시위 △ 보복행위 등 집중 단속
- ②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 강도 높은 수사 전개
- ③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 ✓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조직적 불법행위를** 억단하여, 공정하고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경찰과 아산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 아래 **'단속대상'에 언급된 행위** 발견 시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보자의 신원은 보장되며, **신고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기간 : 2022. 12. 8. (목) - 2023. 6. 25. (일) / 200일간

단속대상		
단속대상	세부 유형	주요 예시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출입통 방해	· 위력으로 건설현장 출입통제 등 출근방해 행위, 공사장 인부 건설 장비 출입방해, 운송방해 등
	각종 폭력행위	· 비노조원, 사측 관계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행위
	사실장거	· 건설현장 내 주요 시설 무단 집단 장거 농성 · 1차 고강농성 행위 등
갈취	손과 파괴행위	· 장비 차량 및 시설물 등 손과·은닉 행위 등
	무단침입	· 건설현장 내부 집단침입, 퇴거 불응 등
	공무집행방해	· 현장 관리 중인 경찰관 또는 조사·점검 중인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행위 · 공사방해 행위 자제를 조건으로 일제히, 노조원 복지비, 관리비, 잔일비 등으로 금품 요구·갈취 · 말쑥을 불문하고 노조집행부·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상대 특별 수당 등 요구 행위 등
건설기계 사용강요 등	채용강요	· 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 노조가입 강요, 노조원 채용 확대서 직강 요구 등
	건설기계 사용강요	· 회사의 건설기계 사용 등을 요구하는 행위
	신분증검사	· 비노조원 등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 등
불법 집회·시위	불법집회 주최	· 건설현장 주변 미신고·금지장고 집회 주최
	집회 문란행위	· 폭행·협박 등으로 질서 문란, 집회 신고장소 이탈 등
	소용기온 위반	· 기존 이상의 과도한 소용을 유발하여, 소용유지명령 소용중지명령 위반
보복행위	보복 폭행·협박 등	· 불명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신고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협박하는 행위 등

【 제보방법 】
연중무휴 24시간 전화·문자 등으로 제보 가능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010-6885-36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배포 일시	2023. 1. 19.(목)		
담당 부서 <총괄>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건설산업과	담당자	팀 장 홍 철 (044-201-4990) 주무관 손재협 (044-201-3498)
보도일시	2023년 1월 1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 ... 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

◆ 주요 피해사례

- ▶ ○○건설사는 최근 4년('19.1~'22.11)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레비 등 697회, 총 38.0억원 지급
- ▶ △△건설사는 '21.10월, 같은 시기에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 (1개 노조 당 100~200만원)
- ▶ □□건설사는 '21.10~'22.2. 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았으며, 결국 '22.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



2023년 1월 20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압수수색

表日日報
 “건설노조 불법행위” 2000여건 신고... 900여명 수사 착수
 양대노총 表日日報
 타워크레인: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겨”... 양대노총 압수수색
 노조전담비: “건설사 신고
 -118개 건설사
 2023년 1월 20일
 03면 (사회)

민경 서울신문
 “윌레비·채용 강요... 건설노조 불법에 1686억 피해”
 노
 세계일보
 尹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나섰다
 2023년 1월 20일
 1면 (종합)
 The JoongAng
 2023년 1월 20일
 1면 (종합)

朝鮮日報
 ‘무법자’ 건설노조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
 1686억 뜯어갔다 전국 34곳서 압수수색
 (사무실·주거지)
 한국경제
 건설노조에 뜯긴 돈, 수도권서만 최소 1361억
 <3년간 윌레비>

노컷뉴스 사회

☰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재보 N+ D+ 0+ Q

시간/사고 -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연이를 휘몰아친 노조 압수수색... 진짜 '불법행위' 때문 맞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 2023-01-19 19:11

4 0 가

정다운의 뉴스톡
 CBS
 경찰, 양대노총 이틀째 압수수색... 노동계 "노조 탄압"

[기자]
 ...다만 이번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앵커]

아니 국토부와 LH 같은 정부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인데, 어떤 부분이 째째하다는 거죠?

[기자]

어제 LH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열흘도 안돼 387개 공구를 전수조사했답니다.

[앵커]

5일부터 13일까지, 열흘도 안되서

[기자]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 물어보니까 LH 지역본부 직원들이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 보고를 받아서 단순 합산했다더라구요.

오늘 국토부 조사도 국토부가 직접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대한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 협회의 주장을 모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사 양측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 실태를 직접 파악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갈무리한 것이죠.

예를 들어 국토부는 290개 건설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 곳은 133곳으로 절반이 안됩니다.

(중략)

애초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을 챙기지 않으면 반대로 어느 기업이 굳이 노조에 가입한 인력을 채용하겠습니까.

여러 불법행위라는 게 살펴볼수록 노사 양측이 서로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행으로 굳어져서 심지어 노조에서 없애자고 제안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노조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벌였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기업측에서 불법행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심사례'를 정부가 '확인했다, 라며 기정사실화 하고 언론이 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건 문제가 있죠.

매일경제

'건설노조' 행패... 건설노조 압수수색

2023년 01월 20일
01면 (종합)

朝鮮日報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2023년 01월 20일
31면 (오피니언)



뉴스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아요

미디어오늘

이메일 / news@mediatoday.co.kr

검색어 입력

미디어 사회 정치 경제 IT 문화 국제 **오피니언** 미오TV 전체기사 독자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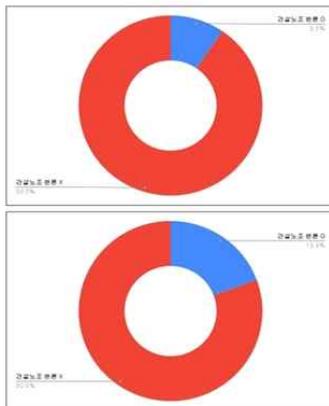
로그인 구독신청 모바일앱 RSS

▶ 홈 · 오피니언 · 민원민 모니터링 보고서

윤석열 '건폭' 435건 VS 건설노조 5건, 받아쓰기조차 기울었다

A. 민주당윤석열캠프 | © 일약 2023.02.28 13:39 | 평점값 0

🔍 📄 🏠 📄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건설노조'

'집회·고발 협박' 건설사서 1억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실태

공동공갈 혐의 징역 2년...공범 노조원 7명엔 징역형 집유
(대전·충남=뉴스1) 김중서 기자 | 2023-09-14 16:19 송고

건설노조 간부, 실제론 조폭이었다...건설사에 금품 갈취해 구속

문화일보 | 입력 2023-03-08 10:25 | 업데이트 2023-03-08 10:30

프린트

AD

朝鮮日報

“건설노조서 3억 준대... 나 1억 너 1억 갖자, 깨끗하니까 괜찮다”

東亞日報

2023년 03월 16일
08면 (종합)

건설노조, 전임비로 月1700만원 뜯기도

대한경제

'건설노조'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 원청사 한숨 누는 까닭은

2023년 04월 04일
02면 (종합)

매일경제

“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국토부에 수사권 부여해 발본색원

2023년 04월 27일
04면 (종합)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건설노조'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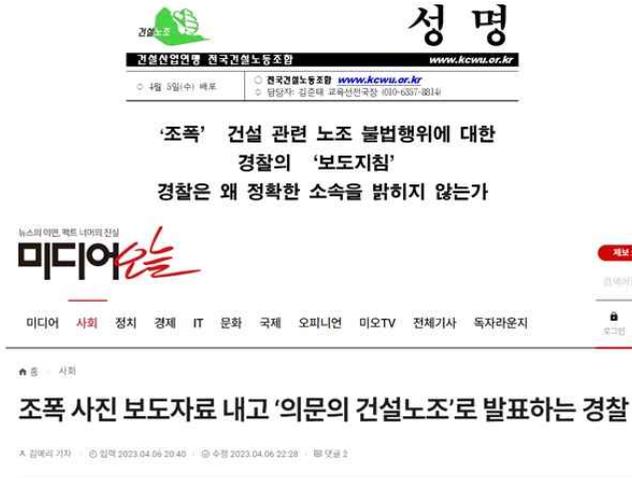
사회 > 전국

그 건설노조 진짜 조폭이었다...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인천지역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에 나온 6명 중 5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건설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무관한 사건, "건설노조" 뭉뚱그려 발표하는 경찰 보도 이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보도자료		기사, 영상, 사진 생로 죽어까지
	보도시점	2023. 4. 5. (수) 10시 브리핑 이후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건설현장 갈취 혐의, 조폭 3명 등 6명 구속

□ 추가 제공이 가능한 자료

- 피해자 인터뷰 (목소리 변조 및 얼굴 모자이크 필요)
- 압수수색 동영상 및 사진 (얼굴 및 조합명 모자이크 필요)
- 압수품 및 수사서류 전시 사진

<동영상 및 사진 모자이크 처리 범위>

	모자이크 처리 범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소리 변조 및 피의자 등 개인 얼굴 전체 및 조합명 이외에도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책임자	총경	경재남 (031-888-2043)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 수사 2계	담당자	경정	이영중 (010-9149-1129)





보도 일시	2023. 3. 9.(목) 10:30	누리망·방송	2023. 3. 9.(목) 10:30
-------	----------------------	--------	----------------------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책임자	총경 임경우 (02-3150-2068)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이영태 (02-3150-1144)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 ① 총 581건 2,863명 단속 ⇨ 102명 송치(구속 29명), 517건 2,695명 내수사 중
- ② 유형별 월례비 등 금품갈취 최대75% / 신분별 양대 노총 77% 기타 노조단체 등 23%
- ③ 경찰청에 '종합분석팀' 설치, 상위 단체의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에 대해 수사 확대

□ 주요 단속 유형

-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시 삼아 사실상 감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폭 가담 사례 >

-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되었다.

-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범법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하였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①)

-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 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였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②)

< 환경단체·장애인노조 사례 >

-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되었다.
-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하였다. (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③)
-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하였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④)



원희룡 국토부 장관
 “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 원인”
 (22.12.23. 페이스북)



원희룡 국토부 장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건설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23.03.03. 동아일보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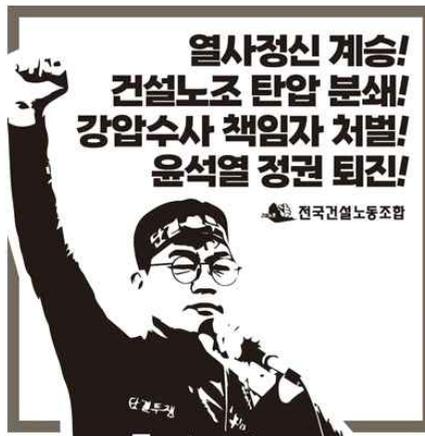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기본권 빼긴
 선량한 노동자 보호..”
 (23.01.12. 페이스북)



그리고 양회동 열사

- 2023년 10월 현재
- 압수수색 - 20차례
- 구속 - 누적 35명
- 경찰 소환조사 1,900여명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강노조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양희동 입니다.
 제가 오노 분신을 하게 된건 직업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정시법 위반으로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 이겁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재충기 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으겠습니다.
 한때 래서 기쁘고 행복 했습니다.
 사랑 합니다. 영원히 동지를 옆에 있겠습니다.

가족, 건설노조, 정당, 언론 등 총 5개의 유서 남겨



경향신문

2023년 05월 03일
27면 (오피니언)

‘건폭 몰이’ 수사가 억울했다는 건설노동자의 분신

경향신문

2023년 05월 03일
04면 (사회)

노조엔 ‘건폭’, 교섭엔 ‘공갈’ 딱지... 몰아친 정부 책임론

한겨레

2023년 05월 03일
04면 (사회)

여당, 분신 사태에도 ‘노조 때리기’
 “건설현장 폭력행위 뿌리 뽑을 때”

경향신문

2023년 05월 04일
04면 (사회)

경찰 “특진 50명” 내걸고, 정부 ‘건폭몰이’ 맞장구쳤다

한국일보



메아리

‘건폭’이라는 이름이 죽이는 것들

이진희 논설위원



朝鮮日報

민노총, 내일尹정부 규탄집회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치료중 숨져

공사방해·감취 혐의 수사반던 중
영장실질심사 당일 범행시 분신
“기삿거리 있다”며 기자에 전화
기자 도착한 지 1분 만에 불 붙여
민노총 “노조 탄압이 분신 불리
尹대통령이 사과해야” 주장

양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1시간 10분 전인 오전 8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전디발로 걸어가 주저앉았다. 전디발은 춘천지법 감동지원과 춘천지검 감동지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원에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내 불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양씨가 사전에 준비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분신 26분 전인 오전 9시 10분, 전디발에 앉아 있던 양씨에게 민주노총 조끼를

朝鮮日報

2023년 05월 09일
10면 (건설)



서울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구 서울대병원 정례식장에 마련된 분신 사당 노조원 양모씨에게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양씨의 범행은 당초 강판 구속사에 차려졌지만, 이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분신 노조원 시신 서울로... 민노총 대정부 투쟁에 野 가세



대한경제

2023년 05월 09일
08면 (건설)

노·정 갈등 ‘벼랑 끝’... 건설현장 불똥 튀나

대한경제

2023년 05월 12일
08면 (건설)

건단련 “정부 대책 적극 지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대한경제

2023년 05월 12일
11면 (유한)

이젠 건설 불법과의 전쟁... ‘특사경’ 뜬다

(특별사법경찰)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민노총은 민노총 건설회는 노조 노숙 집회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경찰 불허에도 강행 - 교통마비

각시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 건설회'를 열겠다며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남인 2만5000명 동시다발 집회

남인 2만5000명 동시다발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민노총,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

분신 노조원 불붙어 추레한 조국 - 신고도만 해

서울 17일 민노총 건설회는 노조 노숙 집회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주변 시민들 놀라 술판가 부딪혀 '차지' 판권 총회와 잡지까지 호일' 경찰원 '발각가게 이어놓아' 잔술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서울 도심 막고 '술판' 노숙 집회 열었다.



건설노조 2만명 무법 노숙집회... 한밤까지 도심 꼭 막았다

한국경제

길 막고 못자리 깔고 술판... 민노총 '尹퇴진' 노숙 시위

東亞日報

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디지털타임스

민노총 도심 난장 집회... 그냥 넘어가면 정부 근간 무너진다

매일경제

서울 도심 점거하고 술판 노숙집회 벌인 민폐노총

朝鮮日報

법원, 야간 행진 허용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 길 열어줘

2023년 05월 17일 1면 (사회)

2023년 05월 17일 2면 (사회)

2023년 05월 18일 35면 (사설/칼럼)

2023년 05월 18일 23면 (사설/칼럼)

2023년 05월 18일 31면 (사설/칼럼)

2023년 05월 18일 10면 (사회)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못 끄지도 않았다

최준민 기자

입력 2023.05.16. 10:54

업데이트 2023.05.16. 18:00 <

가



양모씨가 사나를 다 부르고 불을 붙이기 전의 상황. 기자 2명과 건설노조 간부 A씨가 양씨를 바라만 보고있고, '독자 제공'

지난 1일 인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건설공사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입각,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5월 16일(화)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010-6357-8814)

열사정신 계승·노동조합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를 위해 앞장서다·산화한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조선일보

사건조작, 악의적 보도로 유가족, 목격자에 대한 2차 가해
최대한의 법적조치 할 것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5월 17일(수)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010-6357-8814)

열사정신 계승·노동조합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를 위해 앞장서다·산화한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 언론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원희룡
5월 17일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동자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1.4전 댓글 607개 공유 75회



경향신문

2023년 06월 19일
27면 (오피니언)

건설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언폭’이다

경향신문

2023년 05월 19일
이면 (종합)

‘노동 혐오’ 드러낸
섬뜩한 ‘보도 폭력’

경향신문

2023년 05월 19일
02면 (종합)

‘악재’ 돌파구 필요한 여권
보수 언론발 의혹 재확산

경향신문

“취재경위 부정확, 사진에 시너통 합성... 보도 윤리 어겨”

경향신문

한술 더 뜬 원희룡, SNS로 음모론 제기

2023년 05월 19일
02면 (종합)

한겨레

2023년 05월 22일
27면 (오피니언)

‘역사의 퇴행’ 실감 나게 하는 ‘분신 배후 의혹’ 보도

기자협회보

2023년 05월 22일
02면 (종합)

‘노조간부 분신 방조 의혹’ 보도 1주일... 후속기사 없는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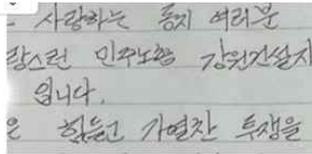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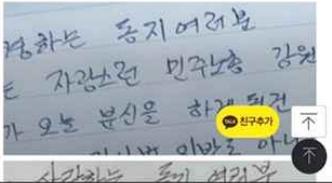
NewsRoom Exclusive > 김광주의 ...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희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공개, 입수한 3장의 유서 중 두 개의 필체는 같지만 한 개는 달라

글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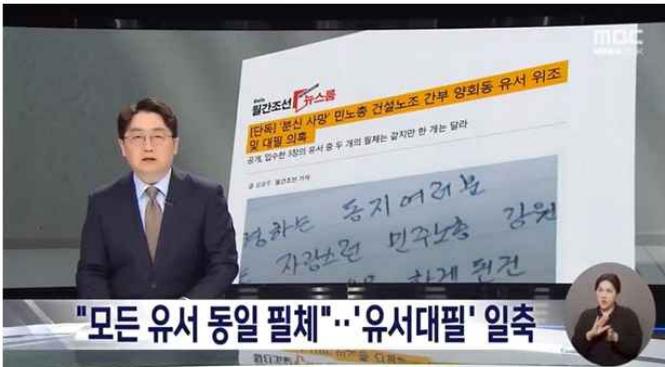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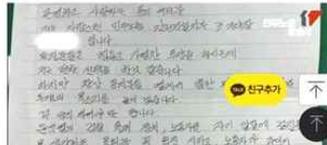
가+ 가-



민노총 건설노조가 공개한 유서 두 장 일부, 사진=민노총 건설노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故) 양희동씨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누군가가 양씨의 유서를 위조(僞造)했거나 대필(代筆)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살펴봐야 할 유서는 지난 5월 4일 민노총이 공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유서의 글씨체는 곳곳하고 반듯했다.



발 표 2

언론이 만든 미신, 노동을 지우다

- 노동 보도 문제점과 대안 모색

탁종렬 소장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언론이 만든 미신, 노동을 지우다

- 노동 보도 문제점과 대안 모색

탁종렬 소장
(노동인권저널리움센터)

1. 노동이 사라진 20대 대선

-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주요 노동 공약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음.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린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노동 공약은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철폐,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 행정 4개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대,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기업의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축소, 대통령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을 약속하며 ‘노동 존중 시대’를 선언.
-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별도의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성과형 임금제도 도입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제시함. 윤 대통령은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 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노조할 권리’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① 보수신문, 심판이 아닌 선수로 참여

-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로 경제 6단체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정 원칙을 밝힘.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경직적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반기업 규제를 쏟아냈다”면서 “이 와중

에 민노총은 불법·폭력 면허증을 받은 집단이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 회동’의 의미를 부여함. 조선일보는 화물연대를 직접 겨냥하면서 “조폭과 똑같은 지경인데도 문정부는 끝까지 방관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금 세계는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

- 매일경제는 같은 날 사설에서 “시장과 자유를 강조한 윤 당선인 발언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 모두 흡족했다고 한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 탓에 기업인들의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고 이날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을 평가.
- 중앙일보는 3월 28일 ‘재계에서 제안받은 새 정부 10대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2년제 기간제·파견 규제를 없애고, 52시간제를 손질할 것”을 주문. 10개 과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구체화·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차등 등 5개가 노동 의제임.

재계에서 제안받은 새 정부 10대 규제개혁 과제		*중앙일보 대한상의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조사
廢	改	制
과감한 폐지 1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 규제 폐지 2 복합쇼핑몰 등 출점 제한 규정 전면 철폐 3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폐지	합리적 보완 4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구체화 5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합산 허용 6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7 공정거래법 동일 혐의 조사 제한	혁신적 지원 8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의무화 9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 위한 ‘K패스’ 도입 10 연구개발 분야의 선제적 인프라 지원

② 신문보도의 출처는?

- 윤석열 후보는 2월 15일 청계광장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은 오를 대로 오르고 월급봉투는 비었고 나라빚은 1000조가 넘었다. 그런데 집값, 일자리, 코로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있느냐”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였는데, 전날인 14일 대부분의 신문은 일제히 <월급 올라봤자네…작년 근로소득세만 47조 떼갔다>(중앙일보), <제자리 월급에 세금은 더 났다…직장인은 ‘봉’>(국민일보) 등 ‘국민 약탈하는 세금’ 관련 기사를 쏟아냈음. 이 기사는 2월 6일 전경련 산하기관인 1)한 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월급 올라도 체감 못 하는 이유 있었네>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였음. 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알린 신문보도는 없음.
- 윤석열 후보는 2월 17일 서초동 유세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600조~700조 원을 더 썼다. 국가재정과 세금을 이렇게 써서 도대체 뭘했냐”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음. 그러자 모든 신문은 다음날 <3년째 마이너스 재정…나라

1) 올해 9월 18일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합해 한국경제인연합으로 출범

살림 100조 원대 '적자의 늪'>(한국일보), <4년 뒤 국가부채비율 증가 폭 한국, 18%p 뛰어 'OECD 1위'>(매일경제) 등 '국가 부채 위기론'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냈음. 이 보도의 출처도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임.

2.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진 나라

- 2021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왜 불평등 해소 정책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2021 불평등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서 한국은 불평등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가진 나라로 평가.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
-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85%의 대중적 지지를 받던 '최저임금 1만 원'은 2019년 20.5%의 지지율로 내려앉았고, 2017년 7월 18일 서울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57%가 찬성했지만,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이후인 2020년 6월 29일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가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대는 55.9%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함.
- '혼란스러운 인식'에는 언론의 왜곡 보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① '공정' 프레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 2020년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 불거지자, 보수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으며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됐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함. 이 보도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음. 마치 '하늘에서 용단 폭격하듯' 기획 기사, 칼럼, 기고, 사설 등을 총동원해 여론을 왜곡하였음.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이를 반영하거나 바로잡은 보도는 없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회사로 정규직화됐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기존의 용역 회사에서 소속만 자회사로 변경된 것뿐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

‘비정규직 제도’로 청년 일자리만 줄었다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비정규직 제도’ 정책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텍스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분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17명으로,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절반가량(4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3분의 2인 23곳에서 신규 채용이 줄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탓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비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정규직 공채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채용 기회를 잃었다며 비정규직 제도 정책이 또 다른 불공정을 조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기업 직원 수와 총액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 이후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정부 출연연구소도 ‘비정규직 제도’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5개 소관 출연연의 신규 채용은 2016년 637명이었으나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탓도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비정규직 제도’ 정책의 여파가 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전환한 한전은 신규 채용이 2019년 1772명에서 지난해 1047명으로 40.9% 감소했다.

공기업 경영악화, 대선 앞둔 여야 후보

東亞日報

공기업 채용 반 토막 ‘일자리 정부’의 역설

● 광학문에서



정 임 수
경제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사흘 뒤 헬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를 선언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즉각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2020년 들어 정부 주도로 이를 밀어붙이자 기존 정규직 직원과 청년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엔 “채용 무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

나”는 글이 쏟아졌다. 역차별을 성토했던 청년들의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 2019년 149명이던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지난해 7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인천공항공사만이 아니다. 주요 공기업 35곳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최근 2년 새 47% 급감했다. 2019년에 1만1238명을 뽑았는데 2020년 7631명, 지난해 5917명으로 뚝뚝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향도 크지만 ‘비정규직 제도’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채용을 중단한 한국마사회, 강원랜드를 제외하곤 비정규직 제도에 앞장서는 공기업에서 채용 부진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② 공무원의 나라?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만 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음. 이에 대해 보수신문은 ‘공무원 공화국’ ‘공무원의 나가가 됐다’며 공격하였고, 노인복지 성격을 갖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세금 알바’라고 비하함. 중앙일보는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에 입성하려는 청년이 늘어났다”고 비하하였음.
-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0년 기준으로 10.2%(2018년 기준 7.8%)에 불과한 수준임. 이는 OECD 기준(2017년 기준 17.7%)으로 꼴찌 수준임. 대표적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공공부문 고용 규모는 24%임.

인건비 90조 vs 86조 공무원의 나라 됐다

(공공부문)

(500대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었다.

포퓰리즘(대중연방주의)은 달콤하다. 나맛을 평평 나눠 주니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맛보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를 다시 찾게 된다. 포퓰리즘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정치인에게 권력을 안겨주지만 중독에는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국민을 반론의 나라로 몰아드린다. 국민을 단맛으로 유인해 기쁘고 온갖을 보게 하는 게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논설위원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망령이 한국에도 어른거리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4년간 11만3350명이었다.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571명보다 많다. 지자체 주민이 줄어도, 학생이 줄

당양,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부도론부터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먹구구인 정책은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잉 공무원이다. 파면드레우 전 총리가 '공무원 공화국'의 문을 연 그리스도 대표작인 예다. 30만명이던 공무원이 2010년에 71만명까지 늘어 구 허대 공무원이 거

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32%가 '공무원 시험'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정치는 양다리 놓기와 행정 서비스 개선을 공무원 중위 명단으로 내세우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데다 60년

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32%가 '공무원 시험'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할 일까지 없거나, 민간 감독제도 사법행정 공무원 불복하고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 저위급 위임스펙다. 정부가 시급에 해야 할 일을 관료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야 어렵지만 내사 피로 조직으로

3. 노동 혐오 보도 사례

① 화물연대 파업

- 조선일보는 '국가 물류를 인질로 잡은 민노총의 정치투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노정(勞政) 전면전'을 유도. 조선일보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 내내 이어졌음. 24일 사설 <경제 한파에 돌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에서 "민노총의 세 과시와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며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됐다"고 정부에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매일경제는 "정부가 화물연대에 굴복한다면 다른 노조 역시 막무가내식 요구를 계속할 게 뻔하다"며 타협하지 말 것을 주문했으며, 중앙일보는 "정부는 지난 6월 처럼 어정쩡하게 사태를 봉합하는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함.
-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 보수신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백기투항'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일부 신문은 한술 더 떠 화물연대 멈춰 세운 기세 몰아, 주52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나섰음. 한국경제신문은 "노동계 파업 대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년 초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착수할 방침이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함.
- 보수신문은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던 기존의 노동 보도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도함.



② 조선일보의 '건폭몰이'

- 공을 들여 '건설노조=조폭' 프레임 만들기에 앞장섰음. 조선일보는 기사뿐 아니라 사설을 통해서도 건설노조에 '조폭 프레임'을 씌웠는데,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관련이 없음에도 기사 제목에서 '건설노조'라고 특정하고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건폭몰이'에 나섬.
- 지난 2월 16일 광주고등법원이 월레비를 사실상의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 광주고법 판결 이후인 2월 21일 사설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에서는 "118개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월레비와 노조 전임비 등을 강요받고 노조에 뜯긴 돈이 3년간 1686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건설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함.
- 다음날인 2월 22일 사설 <'월레비' 뒷돈 243억 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에서는 "전국 건설 현장은 노조의 폭력 갑질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비노조원 기사를 쓰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일감을 독식하고 월레비를 안 주면 작업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아 왔다"라며 "조폭과 다름없다"라고 씀.
- 조선일보는 1월 20일 사설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천지>와 3월 1일 사설 <국민 지지 믿고 건설노조 협박에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최근 속속 드러나는 건설노조의 횡포를 보면 그간 건설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 없었다”면서 “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뽑으면서 ‘무술 유단자에 몸무게 90kg 이상 우대’를 내걸었다고 한다. 조폭 행태와 같으니 ‘건폭’이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

- <민주노총 파업이 잦아간 ‘초등생 교실’>(1월 10일)
- <아침 7시부터 확성기 튼 민주노총…주민 골병>(1월 12일)
- <‘무법자’ 건설노조 1685억 뜯어갔다>(1월 20일)
- <노조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레비(웃돈) 요구…감당 어려워 공사 포기도>(1월 12일)
- <타워크레인 기사들 月 1000만원 웃돈…업체 “기사들 노조에 상납”>(1월 20일)
- <불 지른다 협박하고 각목 휘둘러도 ‘집행유예’>(1월 20일)
- <경찰 “건설사 돈이 노조 상부로 흘러간 경로 추적”>(1월 20일)
-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공사장 돌며 수천만원 갈취>(2월 14일)
- <건설사 협박해 300억 뜯은 건설노조 35명 입건>(2월 11일)
- <타워크레인노조, LH공사장서 年 116억원씩 뜯어>(2월 20일)
- <“건설노조서 3억 준대…나 1억 너 1억 갖자, 깨끗하니까 괜찮다”>(3월 2일)
- <한노총 부위원장, 건설노조 뒷돈 수익 받았다”>(3월 2일)
- <월레비 못받자 태업…전국 공사판이 느림보 됐다>(3월 6일)
- <건설현장 ‘건폭’ 잡고 보니 진짜 조폭>(3월 9일)
- <건설노조 간부, 현장서 전임비로 1억6000만원 뜯어내>(3월 16일)
- <건폭 피의자가 경찰청 앞에서 적반하장 집회>(4월 12일)

4. 언론개혁과 미디어 비평

- “(언론개혁의) 효율성만 놓고 볼 때 언론사끼리의 비판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다. 자신이 남을 비판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할 순 없다. 미디어 비평이 서로의 비평을 끌어내고 활성화될수록 언론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 손석희
-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폐지된 이후 미디어 비평을 찾아볼 수 없음. 조선일보는 사설 <공영방송의 이상한 미디어 비평>에서 “공영방송다운 품격

과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방송”,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를 잡아서 양쪽의 주장을 나열하다가 대개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진보 언론의 해석이 맞다는 식”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정권의 흥위병’이라고 비판함.

- 동아일보는 “중립적인 언론 미디어 비평이라기보다 정치적 색채를 띤 편향적 비평을 중심으로 방송한다고 비판”함.
- MBC <알고보니>, KBS <팩트체크 K>, SBS는 <사실은>, 연합뉴스 <팩트체크> 등 공영언론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통해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부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정치 의제에 한정돼 있으며, 국가 재정, 복지, 고용, 노동 등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정책 의제에 대한 검증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공영언론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며 팩트체크는 힘을 잃고 있음.



- 지난해 7월 한국경제신문은 사설 <방송까지 가세한 '부자 감세' 프레임 - 고액 납세자가 죄인인가>에서 "KBS, MBC 등 지상파 TV를 비롯해 라디오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까지 이번 세제 개편이 부자들 배만 불린다고 오도하고 있다"고 불평을 쏟아냈음.
-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란 여론이 높아지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인데, 최근 정부·여당과 보수신문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근본 이유임.
- 보수신문은 한국 여론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며 여론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보다 여론의 균형이 필요하며 여론의 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함. 대표적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서 확인됐음.



- 월간조선도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했다”고 의혹을 제기함. 그러자 MBC는 5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세 꼭지의 보도를 통해 월간조선의 유서 대필 의혹을 일축함.
- 5월 30일 월간조선은 “양회동 유서 대필 기사 사실이 아니다”며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함. 월간조선은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하였음.

NewsRoom Exclusive 월간조선, 유서대필 보도

MBC, 팩트체크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공개 입수한 유서 중 두 개의 필체는 같지만 한 개는 달라

글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4961009@chosun.com

기자가 입수한 민노총 내부문건에 나온 유서의 글씨체도 이 때와 같다. 이 유서는 지난 5월 10일 <민노총 건설노조 임시중앙위원회 회의자료>에 나온다.

우선 살펴볼 할 유서는 지난 5월 4일 민노총이 공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유서의 글씨체는 곳 곳하고 번듯했다.

기자가 입수한 민노총 내부문건에 나온 유서의 글씨체도 이 때와 같다. 이 유서는 지난 5월 10일 <민노총 건설노조 임시중앙위원회 회의자료>에 나온다.

그러면 민노총이 지난 12일 공개한 양회 유서의 글씨체는 앞서 두 개의 유서와 확연히 달랐다.

2023.05.23

연속재방

마지막 유서 추가 발견. "노조 탄압 중단 시켜 달라"

모든 유서 동일 필체.. 전문가들 유서 대필 의혹

양회동 두 유서, 동일한 작성했지만 다 큰 글씨체?

은 대필된 '불법 시위 열정 대량', 야당 '회중 투표 시권 자유 빼앗는 것'?

'국회 출입을 왜 막나' 전세사기 대책비 '보도' 것창조 '법적 지원'

inews.mbc.com

양회동 유서, 동일한 작성했지만 다른 글씨체?

모든 유서 동일 필체.. 전문가들 유서 대필 의혹

양회동 두 유서, 동일한 작성했지만 다 큰 글씨체?

민노총 유서

분신 장면 담긴 조선일보 CCTV 사진.. 검찰-경찰 "제공 사실 없다"

5. 노동 혐오 보도 바로잡기를 위한 제안

- 노동 전문가(연구자, 법률가) + 언론인 + 언론 매체 + 시민·노동조합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건설.
-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노동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허위·왜곡 보도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팩트체크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 의견을 제시하여 언론인에게 제공해 취재 지원.
- 언론인들은 정책 의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란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려는 언론사는 미디어 비평을 강화해야 함.
- 언론매체는 소속 기자들의 노동 전문성 강화를 보장해야 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은 ‘좋은 기사’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언론인과 언론 매체 후원에 앞장서야.

발 표 3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

정현진 기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

정현진 기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정현진 레지나 기자입니다. 저희 매체는 올해 14년이 되었고, 저는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게 된 것이 어찌면 영광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는 것은 어찌면 20여 분간 제가, 그리고 저희 매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문을 읽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한편 마음이 무겁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노동 보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온 당사자로서, 그럼에도 이 자리에 제가 앉기로 한 것은, 이 발표를 통해 저와 저희 매체가 함께 그간 노동 문제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성찰할 기회로 삼고, 또 그동안 노동 관련 문제를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여러 사건과 상황을 듣고 파악해 온 기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과 경험 그에 따른 여러 고민을 공유하고, 공명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교계 매체가 주로 어떤 틀 안에서 노동 이슈에 대해 보도했는지 살피면서 그 한계를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한 축으로는 그동안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 미처 보도하지 못했지만 알게 되었던 문제를 통해 교회 안의 노동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를 나눠보겠습니다.

1. 교계 매체의 노동 보도,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지 못했나

이 토론회는 언론의 노동에 대한 경시와 부정적 태도, 권력의 감시와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고유한 기능의 상실이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자들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교계 매체의 노동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매체와 조금 다른 양상과 태도를 갖습니다. 교계 매체 보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폄하, 왜곡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 노동자의 가치와 존재, 노동 관련 이슈, 관련법, 사건 등에 대해 과연 충분히 심도 있게 알렸는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여러 맥락,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점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계 매체 노동 관련 기사들의 형태를 보면 1)노동 문제가 발생한 현장 보도 2)노동절 담화나 세미나 등 교회 가르침에 대한 내용 3)노동사목위원회 등의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4)교회 내 사업장 노동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콜트콜텍, 기륭전자, 쌍용자동차, 아시아나케이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한진중공업,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KTX 승무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주 택시노동자, 서울에너지공사 스타플렉스(파인텍),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스타케이칼, 삼성반도체, 동양시멘트, 부산협동양조(생탁), 이주노동자노조, SK,LG통신 비정규직, 씨앤엠, 코오롱, 재능교육, 유성기업, 지엠대우, 택배노동자, 대전 롯데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동안 다른 교계 매체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다뤘던, 노동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노동자들입니다. 몇몇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이라 빠진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공통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수많은 노동 현장 중에서 “교회가 연대한 곳”, 즉 수도자들이 찾아가고, 사제들이 미사를 함께 봉헌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 세대가 겪고 있는 구조적 가난, 고통은 상당 부분 노동권의 박탈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자본에 의해 존엄을 잃은 이들, 노동자 또 그 가운데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이렇게 그 대상이 분화,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저희 매체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 기준인 만큼 노동 이슈는 되도록 우선적 취재와 보도의 대상입니다.

수많은 사업체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 역시 다른 매체와 현장의 제보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그 현장으로 바로 찾아가지 못했고, 그 가운데 선택의 기준은 교회가 연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전국 곳곳의 고공 농성장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중앙 매체에서 보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외롭게 싸우는 현장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연대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교계 매체의 역할이라는 반성을 새삼 하게 됩니다. 물론 취재한 현장들을 통해서 노동자 현실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보도의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똑같이 연대를 절박하게 바라는 현장의 노동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소외와 박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노조, 노동자, 노동이라는 말과 가치를 왜곡, 폄하하고 자본의 입장에서 말하는 여론이 있다면, 교계 매체는 이를 바로잡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

항과 제도, 법률 등에 대해 해설하고 설명하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책임에 더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리(2426항~2436항), “새로운 사태”, “사십주년”, “노동하는 인간”, “백주년” 등의 문헌,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노동절 담화 등이 오늘날 생명력을 유지하고 삶이 되기 위해 서는 다른 여러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언론의 책무가 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삶이 같은 맥락에서 일치되고 만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 공간으로서 교계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사실 좀 중요한 맥락을 갖습니다. 언론이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언론을 소비하는 시민들, 수용자들이 무조건 비판 또는 수용하는 것을 넘어, 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적합한 요구를 해야 할 필요를 포함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교계 매체 보도를 통해 본 교회 내 “노동”의 현실

1) 교회 안에서 노동은 언제,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이 토론회에서 제가 맡은 주제는 “교회 언론의 노동 보도와 그 한계”인데, 지금부터는 이 주제를 뒤집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매체를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교계 매체 노동 관련 기사로 분류했던 1)노동 문제가 발생한 현장 보도 2)노동절 담화나 세미나 등 교회 가르침에 대한 내용 3)노동사목위원회 등의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4)교회 내 사업장 노동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노동”과 관련해서 하는 활동은 대략 그만큼인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통해 보면, 교회는 여러 현장에 연대하고 또 다양한 자리를 통해 노동, 노동자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가 사용자의 입장으로 있는 교회 내 여러 사업체와 조직, 본당, 단체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 고용자로 존재하는 사목자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그 노동자성을 존중받고 존중하는가, 교회의 문헌에 적시된 노동조합의 권리와 당위성, 정당한 임금, 안정된 고용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의 주제가 노동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이 특별한 이유는 노동의 고유한 가치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노동을 준비하고, 노동자가 되며, 그 시간을 기반으로 또 나머지 삶을 삽니다. 노동은 자기 자신의 삶을 구현하고 구원하지만, 또 그 노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구하는 것이므로, 어쩌면 “구원”과 가장 밀접한 가치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사제 모두가 “임금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매일 어떤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스스로와 다른 이를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 가치의 중요성과 함께 노동은 교회의 사목 대상, 교회 공동체의 평신도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현실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노동”은 노동자 주일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 언급되고, 특수한 사건에나 인식되며, 노동사목위원회나 정의평화위원회의 연대, 활동으로만 드러납니다. ‘노동’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 일부만 관심을 갖는 특별한 사목 활동,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동은 (나를 제외한) 어떤 특별한 계층, 계급을 부르는 말 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는 이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 언론이 “노동”을 소외시킨다는 평가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부릅니다.

2) “노동조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본 교회와 노동

존재의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대조사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조사회로서 교회가 이상적 공동체를 이미 이뤘느냐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느냐입니다.

교회 내 조직, 사업장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존재하고, 당연히 갈등과 문제도 발생합니다. 저는 교회 내에 어떤 문제나 잘못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어떤 해결 과정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관련해 교회가 경험했던 일, 그리고 그 일들을 취재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2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노조 파업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대략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중앙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2002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217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가 있었지만, 이후에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었으나 노조 책임자 5명은 끝내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해고된 지 10년이 지난 2013년, 의료원과 해고자 간 화해와 치유의 기

회를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기사를 쓰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장기 파업과 해고라는 큰 사건을 겪은 뒤 1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어떤 변화나 성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가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 갖는 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지 복직의 시일이 지나 지난 일이 되었을 뿐,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썼던 기사 일부입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3년 12월 27일 기사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사 합의로 실천기준 마련해야” 일부 발췌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톨릭 병원 노사관계 향한 미국 교회의 노력

1997년부터 미국 가톨릭 의료기관 역시 많은 노사 분규를 겪었다. 주로 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 노조 결성에 대해 의료원 측은 반노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로 수녀원이 경영하는 병원이 많은 탓에 1996년 설립된 ‘노동자 정의를 위한 전국 종교간 위원회’는 노조와 수도원 운영 의료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자 사용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교회의는 1999년 8월, 주교회의 산하 ‘가톨릭 의료기관과 노동 소위원회’를 통해 〈가톨릭 의료기관에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장을 위한 원칙과 실제〉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가톨릭 의료기관과 노동 소위원회’는 의료기관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교, 가톨릭 의료기관 대표, 여자 수도자 장상연합 대표,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소위원회는 병원 업무와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톨릭 사회교리 원칙과 정의로운 직장을 만드는 요소를 서로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그 결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장을 위한 원칙과 실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장의 조건은 공정한 임금과 충분한 복지 혜택, 안전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노동자가 자신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1999년 6월 미국 주교회의가 선포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기—가톨릭

릭 의료기관과 노동조합을 위한 안내와 선택》은 주교, 가톨릭 의료기관 경영자, 노동조합 지도자 등이 수년간의 토론을 통해 내놓은 결실이다. 이는 가톨릭 의료기관과 노동조합이 기존의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바탕을 둔 ‘평화협정’이며, 나아가 가톨릭 학교, 교구, 본당 등 모든 가톨릭 기관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존중에 관한 가톨릭 사회교리 실천지침서다.

내용은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가치를 두며, 가톨릭 의료기관의 신앙에 바탕을 둔 사명, 가톨릭 정체성, 예수의 치유 사목의 모범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화된 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인식하고 존중한다고 밝히며, 의료기관과 노동조합 모두가 환자 치료에 헌신한다는 것을 인정, 각 인간을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한다고 천명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7가지 원칙은 상호존중,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진실한 의사소통,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소통 과정, 지역 합의의 의미 있는 강화, 노동자의 결정에 대한 존중 등이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과 가톨릭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 가톨릭 주교회의는 직장에서의 대표성 문제에 관하여 노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보장하는데 가톨릭 사회교리가 어떻게 노동조합과 경영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해야 하는지 10년 이상 조용히 본질적인 대화를 가져왔다. 이 특별한 논의가 이 문건을 만들어냈다. …… 우리는 이 문건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가 모든 해결책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분쟁에서 오는 고통과 손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분쟁의 현상 유지는 우리 모두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기—가톨릭 의료기관과 노동조합을 위한 안내와 선택〉 서문 중)

지난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윤리헌장〉을 마련했다. 총 4부로 나뉜 윤리헌장의 내용은 한국 가톨릭교회 의료활동의 역사와 기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과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활동, 가톨릭 의료활동의 기본 원칙인 인간 존엄과 생명 존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 적용과 실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는 노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으며, 대체로 미국 주교회의가 선언한 내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미국 주교회의의 문헌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사측의 일방적 지침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함께 오랜 시간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 교회는 양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병원 노사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관련 기사

“책임” 없이 ‘상처’만 계승한 가톨릭 병원 [CMC 해고자 복직, 어떻게 풀 것인가 - 1]

3. 노동조합

우리가 연대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생활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은 노동자가 가지는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사회 교리는 노동자가 연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 회칙에서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조합이 지극히 유용한 조직이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이후 역대 교황들도 이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톨릭교회는 사회를 이루려는 인간의 특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자발로 연대하는 중요성과 보조성의 원리의 내용을 사회 교리로 가르치면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는 더욱 연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사회 조직이 번창하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운용될 때 전체 사회에 그만큼 유익하다고 사회 교리는 가르치고 있다.

요즈음 우리는 노동조합을 타당한 이유로 비판한다. 예를 들면 조합 내부의 부정 부패, 집단 이기심, 격렬한 쟁의 행위로 공중질서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경쟁력일 잃는 부정 사례들을 지적한다. 분명히 노동조합 활동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노동조합이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지구 자원을 공정하게 활용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가르친다.

사회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필수이다. 그래서 사회 교리는 경제 영역에서 노사가 대등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확고한 요소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제 정의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기 때문이다.

사회 교리는 잘못된 노동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유보하는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밝히고 있다. 첫째, 증오와 폭력으로 인간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대립 상태로 몰아가는 경우, 둘째, 가톨릭교회 신자가 노동 운동 때문에 신앙심을 저버리고 현세에서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경우, 셋째, 사회 교리를 임의로 해석하여 노동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공동선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퇴색시키는 경우, 넷째,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경영자, 소비자, 일반 시민의 정당한 관심과 이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이것은 교회가 노동조합 운동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 지적한 잘못들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에 투신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다. 교회는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의 주역이 되어 노동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에 매진하라고 사회 교리를 통해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은 갈수록 조직율이 줄어들어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변할 뿐 대부분의 노동자는 갈수록 열악해진 생활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일을 못하는 점에 관심을 둔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출처 :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교회의 가르침이 이런데, 왜? 라고 묻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여서일까요? 앞에서 저는 교회가 대조사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방향성 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통해 환자들을 기만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며, 법질서를 무시한 그동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한국 의료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 보건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0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

2002년 파업 당시, 서울대교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내용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는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런 아픈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가르침과 저 현실 상황에서 밝혀진 입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언제 어떻게, 덮어놓은 상처가 다시 덧나게 될지, 같은 자리에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 밖의 연대와 교회 내의 노동 현실 사이에서 모순을 겪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언론으로서 다하지 못한 책무, 이미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지해 온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계 매체 기자로서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도하고 싶다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공감과 지적 모두 좋습니다. 다만 오늘 모든 발표 안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논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백성의 길, 함께 하는 여정, 시노달리타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주제토론 - 토론문 1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1. 언론과 대중의 노동 혐오, 그 원인과 개선 방법

정확히 보자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인 것 같다. 언론이 다루는 노동조합에 대한 보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집회 관련 보도일 것이다. 집회 관련 보도는 경찰과 참가자 사이의 충돌 등과 같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된 보도의 틀이 변화될 부분이 없고, 다수의 기성 언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회에 대한 불편함을 강조한다. 독자의 불편함을 자극하고 공통으로 공격의 대상을 노조로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 본다.

반면, 노조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이나 부당함을 알아내는 일상적 활동이나 소규모 기자회견 등에 대한 보도는 고발성 목적을 띠더라도 크게 집중될 이슈로서의 성격이 없다. 특종으로의 성격이 부족하고, 클릭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사측의 보도자료가 받아쓰여지는 보도들은 쏟아지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이나 반박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적다. 노동조합의 입장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10% 수준으로 멘트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 지형에서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기울어진 곳에서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는 환경이다.

개선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에서 교과서적으로 다뤄왔던 부분이고, 지면 언론의 지형에서 온라인의 지형으로 대다수가 옮겨간 환경 속에서 노동의 보도는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공감대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 그렇기에 노동에 대한 보도는 재미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집회 보도가 아니라, 심층 취재나 현장 취재 등이 반영된 문제를, 반복되더라도 계속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노동 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노동과 관련한 보도 개선을 위해 '노동 전문 기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류 기성 언론은 노동문제에 대한 취재를 사회부에서 담당하게 하며, 주되게 사건 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건설노조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는데 주되게 ‘노동계의 입장’으로 같음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이슈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진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수 보도화되지 않는다.

3. 가짜 뉴스 식별 방법

양회동 열사와 관련한 조선일보, 월간조선의 행태를 봤을 때 보도가 되는 근거의 출처와 문제 제기에 대한 취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단순히 기자 개인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와 취재는 사실상 전무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독자에게 식별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가 가지는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언론사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함에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 발현되는 각종 의혹들을 검증 없이 보도화한다. 언론의 무게감이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고 본다.

독자 개인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보도 속 취재 과정이 어떠한지,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항상 의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